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더불어 광장

2023. 09. 18 (제30호)

당원용

www.jnminjoo.kr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비확보에 총력 기울이기로
한국에너지공대 방문하여 지속적 관심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 둔 시점에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및 신정훈 도당위원장 그리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했으며 전남도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주요 간부들이 함께했다.

최근 민생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위기 상황에 전남도가 처한 여러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전남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전남도에서는 정책지원 건의 10건과 예산지원 건의 12건에 대해 보고하며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국비확보와 입법 활동 및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적극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권 예산 요청 사업 전반을 설명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전남 예산현안을 살피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의 긴축기조 상황에서도 전남의 예산 확보를 위한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은 사실상 감액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명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의 실질적 지원과 일본에 구상권 청구,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삭감 문제 해결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정치적 감사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에너지공대의 예산 삭감 및 총장해임 요구 등 부당한 조치에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전남의 열악한 상황을 인식해 전남의 의과대학 문제,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주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전남예산이 4.9% 순증 했지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농도 전남의 시너지를 위해 부여된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함께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 후 현장 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출연금 대폭 삭감 결정과 총장 해임건의 등 정치적 탄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논평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 내고자 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폭압에도 굳건히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온몸을 던지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편 가르기와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국민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으로 분열되고 있으며 또한 피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끝없는 벼랑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연설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고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며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이어야 만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탈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련과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는 김대중 정신과 가치는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 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처럼...

민주당 전남도당은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셨던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받아 이 땅의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불 살려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평화의 물결이 한반도에 넘쳐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의 영면을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2023. 8. 1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도당 혁신운영 방향

"신정훈이 약속하겠습니다!"

1 당원에게 친절한 도당 실현
2 단계별 당원교육시스템 구축
3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지원단 운영
4 도당 회계시스템 개선으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위원회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5 전남형 정책강화를 위한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 운영
6 지역성장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실현 방안 마련
7 2024 총선승리 위한 총선기획단 운영
8 민주당원 누구나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교육연수위원회 기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1년

지난 1년과 앞으로의 1년을 말하다

취임1년 맞아 지난 성과와 미래 설계 밝혀

2024 총선승리로 '역행하는 민주주의 바로 지키겠다' 의지

전남도당, '위기의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오직 민생! 달라진 민주당!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를 기치로 전남도당을 이끌고 있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나주 · 화순 국회의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및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1일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전남도당위원장에 추대되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독재정부, 대일 굴욕외교, 벼랑 끝 서민경제, 국가재난안전시스템 붕괴 등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전남도당이 당의 혈관조직인 당원과 지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자치정당, 지역과 민생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정책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기고 호남 정치의 맥을 뛰게 하여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은 대통령선거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민주당만 바라보며, 변함없는 성원 속에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는 당원과 지역민 분들께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도당이 더욱 변화와 쇄신으로 희망을 보여드리려 노력한 시간이었다.

그 결과 전남도민과 당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유능한 전남도당이 될 수 있도록 △'전남형 기본소득추진특위'를 구성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와 검토 △민주당다운 전남형 정책강화를 위해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 운영 △농도(農道)전남 농민들의 피눈물과 절박함을 위로해 줄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민생위주의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전남도당 산하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지역 현안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농촌일손돕기 및 김장나누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남은 1년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민생우선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2024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운영 △선출직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과 의정지원단 운영 △지역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남도지역혁신 우수조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해 정책비전과 대안제시로 전남도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혼돈의 시대,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바로 지키겠다"고 말하며 "2024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이 냉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겸허히 국민들 편에서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 · 지역소멸 등 위기의 전남이 처한 여러 현안들에 전남도당이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과제들을 더 치열하게 모색해 도민이 공감하고 당원이 호응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의 안전보다 일본이 더 소중합니까?

윤석열정권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

국민 85%가 반대함에도 괴담과 선동으로 일축

결국 기시다 일본총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시점을 8월 24일로 확정했다.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일본총리는 오염수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도쿄 전력에 신속하게 방류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등 무대책이며 굴욕적인 외교를 일삼고 있어 자칭 '1호 영업사원' 은 더 이상 무능하여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 졌다.

오로지 일본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망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85%가 반대함에도 이를 선동과 괴담으로 일축하는 정부 · 여당은 진정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의 정권은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퇴행시키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장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목전에 닥쳤어도 정부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에만 열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거론되던 시점부터 사실상 방조와 묵인으로 이를 정당화해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측 언론보도에도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등 굴욕적 저자세로 국격과 자존심을 뭉개뜨리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요구사항과 입장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대체 누구를 살피고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하고 돌아보기 바란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의기투합하며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생존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을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묵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 8. 2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도와 내년 국비확보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진행

한국에너지공대 사태 및 전남 공공의대 등 주요 현안사업 논의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전남도와 지난 8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전남의 지역 현안사업 및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요 정책지원 건의 9건과 내년도 각 지역별 예산지원 건의 60건이 논의됐다.

주요정책지원 건의 9건은 △호남권 미래 SOC 조기 확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안정적 지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농협 · 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제정 ·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입법 추진 등이다.

내년도 예산지원 건의사업 60건은 전남도 핵심사업과 전남 각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현안사업이 주를 이뤘다.

김영록 지사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남도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전남의 새로운 발전과 활력 창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남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해 지역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전남의 열악한 상황을 인식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잘 사는 전남이 되도록 모두가 협력해 가자"고 말하면서 "특히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복한 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너지공대 재정축소와 총장 해임요구는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 핵심 간부당원 교육연수 진행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작년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전남 화순군 금호화순리조트에서 10개 지역위원회 핵심 간부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수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당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선거관련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하반기 전남도당 혁신방향 및 역점사업 전달에 주안점을 뒀다.

총5강으로 구성된 교육연수는 △정치관계법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리시 △전남도당의 혁신방향과 운영방안 △행복한 리더십을 위한 컬러테라피 △기본소득의 이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진행됐다.

서동용 교육연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도당이 교육을 통해 민생정당으로 나아가고 다짐하는 작은 출발이 오늘 시작됐다. 핵심당원으로서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민주당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의를 통해 "민주당의 정책과 혁신 방향을 핵심당원 여러분이 명확히 인식하고 각 지역에서 모두가 노력하고 힘을 합치자"며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변화를 만들어 다가오는 총선승리와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전남도당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광장
2023. 09. 18 (제30호)
발행인 | 신정훈 편집인 | 최필호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전남도당 대책위 발대식 열려

8월 12일 오후3시,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IAEA보고서 문제점 및 오염수 위험성 알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나주 · 화순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시점에 이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전남도당 대책위 발대식을 진행했다.

8월 12일 오후3시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 우원식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어기구 · 위성곤 · 정춘숙 공동위원장, 안민석 · 김상희 고문 및 신정훈 도당위원장, 윤재갑 도당 후쿠시마대책위원장(해남 · 완도 · 진도 국회의원), 김승남(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김원이(목포) 국회의원 및 당 소속 광역 · 기초의원과 핵심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총괄대책위는 당내에 있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원내 주요 상임위원회 및 각 시도당과 연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저지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방조 및 묵인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반대 서명운동 및 규탄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원식 총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지구적 재앙에 손 놓는 행태이며 우리 후손에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IAEA의 면죄부 검토보고서의 부실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교육이 이뤄졌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의 확산을 괴담 선동카드로 일축하는 등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능하고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해야 하며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갑 도당 후쿠시마대책위원장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청정바다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핵 폐수 방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규 선임된 전남도당 후쿠시마 대책위 전남도당 대책위원회 윤재갑 위원장과 부위원장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오염수 방류 저지의 결의를 다지는 구호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지속적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한 지속발전과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1월 12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영 · 호남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주정부 대통령을 배출한 경험을 가진 지역이라는 높은 자긍심으로 영 · 호남 화합과 2027년 제4기 민주정부를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과 지속적 논의를 약속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오직 민생을 살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책임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나주 한전KDN 사거리 300여명 모여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가 국가의 책무

전남도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 하려는 일본의 행태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국민의 생명과 청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6월 5일 오전 11시, 나주 혁신도시 한전 KDN 사거리에서 신정훈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원이 국회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 박연환 회장, 당 소속 광역 · 기초의원 및 당원 그리고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어이 바다에 투기하려 하고 수산물 수입 요구까지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올바른 민심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발언에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편들며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염수 방류로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산업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연환 회장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위축을 불러와 수산업계를 궤멸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사능 감시장비 설치 및 정부차원의 피해대책 특별법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방사능 오염수를 1리터,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그 어떤 대안도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지속가능한 전남 발전 위한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4월 2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더 나은 전남' 한 뜻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남 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당은 4월 2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의 주요 숙원사업 및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논의기구인 '제1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오늘보다 더 나은 전남'을 만드는데 당 · 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는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이개호 · 김원이 · 김회재 · 소병철 · 주철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남 발전 정책에 큰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숙원사업의 정책제안은 전남도당, 전남도청, 10개 지역위원회에서 미리 접수 받아 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주요 정책으로 13개(전남도 6, 전남도당 7)를 선정했다.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된 주요 13개의 정책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농협 · 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지방하천 및 연륙 · 연도교 국가지원 확대 ▶비수도권 관광단지 지정기준 완화 ▶초등생 · 임산부 먹거리 예산 지원 건의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전남형 교통플랫폼'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약 후속조치 ▶인구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전라남도 매입임대주택사업 대상 지역 확대 필요 ▶전남지역 외래 중증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 유치 등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현안 민생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가 추진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 면서 "낙후되어가는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당 · 정이 함께 하는 정책추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많은 위기에 직면한 전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시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면서 "전남도당은 절박하고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

목포
김원이

- 1968년 목포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前 김대중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원 확보

김원이 의원이 목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입암대하수도 호안(보강토블록) 정비사업(10억)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10억)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10억) 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 93억 8,6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그중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총 83억 6,100만원으로 ▲반다비체육센터(장애인생활체육)건립 20억원(시책)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 10억원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6억원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후면도로 절개지 보강 5억원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로 목포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롯해 도로교통 안전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체계적인 김 종자 육성 위한 '김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이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 종자의 육성을 지원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산업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 · 가공 · 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는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과 김 가공산업 메카인 대양산단이 있는 도시로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산업이 세계 일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김 종자 육성 지원으로 김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김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목포) 건립 위한 넥슨재단 후원금 50억 원 약정 유치 환영

7월 5일 넥슨 본사에서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위한 50억원 후원 업무협약식 개최

김원이 의원, 예산확보 위한 민간기업 후원 유치 노력으로 넥슨재단 후원 이끌어내

김원이 의원이 넥슨재단으로부터 '전남권 ·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후원금 50억 원 기부 약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7월 5일 오후, 판교 넥슨 본사에서 열린 '전남권 ·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과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이승택 원장은 약 3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목포중앙병원측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협약했다.

목포시 석현동 목포중앙병원에 들어설 센터는 부지면적 12,023㎡, 지상 3층 지하1층 24병상(낮병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다. 총 72억 원(국비 및 지방비)의 예산을 들여 내년 하반기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건설공사비와 자재비 등이 급등해 최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추진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민간기업 후원금 유치에도 공을 들여왔다. 이에 넥슨재단측이 50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하면서, 총 사업비 122억원을 확보하게 돼 건립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김원이 의원은 "장애아동의 전문 재활치료를 위해 통 큰 기부를 결정해주신 넥슨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목포시민과 전남도민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첫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김원이 의원이 지난 3월 11일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과 국비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 성과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목포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그동안 당 · 정 · 청 협의,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협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전남도 등과 협력,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정원 증원이 추진되는 등 첫발을 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목포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목포 민주당·어민단체 등 원전오염수 방류 및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긴급기자회견 개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안전대책 없는 윤석열 정부 강력 성토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맞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려는 목포지역 정치권, 어민단체가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월 4일 목포수협 본점 앞에서 열린 회견에는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 어민단체로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청룡), 목포시 근해안강망협회(회장 여복수), 목포시근해유자망협회(회장 이지준) 등 많은 이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회견에서 목포시의회를 대표한 김귀선 부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금년 중 방류를 결정한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편만 들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어민들을 대표한 유자망협회 이지준 회장은 "오염수 방류는 청정해역인 이 지역과 어민의 생존권을 다 죽이게 된다"며 성토했다.

이어서,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국제법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오염수 투기를 막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국민안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무단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를 확약하고, 만약 확약하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원전오염수 무단 방류 계획 철회와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181만 전남도민의 염원, 전남권 의대신설에 답하라"

6월 21일, 5분 자유발언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의료공백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수도권에만 대학병원 분원이 총 11개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병원당 최소 200명~500명의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지방의사들을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남대, 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졸업 이후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의 시 · 군에 병원 개원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최근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사증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의협은 의대신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소극적이고, 의대신설을 반대하는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가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81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정부가 응답해야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다.

목포역 대개조, 본격 시작된다!

2024년 국비 예산안, 목포역 개축 설계비 반영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목포역 개축을 위한 설계비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원이 의원의 1호 공약인 목포역 대개조가 본격 시작을 알리게 됐다. 목포역 개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490억원 수준이며, 이는 설계결과에 따라 더 상승할 수 있다.

지난 1913년 만들어진 목포역은 신도심 개발 이후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 · 심화시켜 목포시 재편의 걸림돌이 되어왔고, 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에 맞지 않는 노후 된 시설로 개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100년 역사 목포역 부지에 시민광장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목포역 개축 및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동안 수차례의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른 올해에는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 설득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른 올해에는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 설득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의 열망인 목포역 개축 예산 확정을 목포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함께 노력해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총선 1호 공약을 지키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목포시민이 바라는대로 목포역 개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목포역 시민광장을 비롯한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차질없이 이어져 목포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주철현 의원

폭염 덮친 도쿄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10일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도쿄의 최고기온이 36.1도까지 오른 이날 낮 12시께부터 총리관저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단은 일본어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 '후쿠시마를 잊지 말라'고 적힌 팻말과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문구가 담긴 깃발을 든 채 집회에 참석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세계인들이 오염수 투기가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른 나라의 원전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방류된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 "정상적인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 폭발 사고로 노심이 용융된 원전의 오염수는 다르다는 점에서 거짓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IAEA의 종합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 · 인권 · 환경' 공동대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를 없애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방류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안이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사고 핵폐기물을 공해(公海)에 갖다 버리는 건 일본이 최초가 될 것"이라며 "원전 사고로 인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세계에 사죄하고,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원장

여수 갑
주철현

- 1959년 여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 現 더불어민주당 전남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 現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로 이관 완료, 공공개발 '출발'

공사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신설' …15명 전문 인력 채용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여수박람회장을 5월 16일부터 인수 · 운영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우선 이관위원회는 개정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부를 항만공사가 설립한 「여수엑스포관리(주)」 직원으로 승계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706억원,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철현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 박람회 공공개발 사후활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며 "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 활용에 대한 의지와 역할을 시민들 앞에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박람회법을 개정한 것이, 박람회장 공공사후활용의 본격적 시발점이 됐다"며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로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 것은 시민들이 염원한 사후활용 공공개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립 촉구

…교육부장관 "방안 강구"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한 사항 중 17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한의대(한방병원)와 전문병원 설립 약속 이행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21년 11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여수대 · 전남대 통합과정에서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책임을 재차 물으면서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전남대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약속 이행 의지와 적극 추진의사를 표했다.

전남대-여수대는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통합양해각서를 발표했지만, 양해각서 중 제4항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약속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립 약속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 "부총리께서 책임지고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고,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대, 여수시와 협력해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건립 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립 약속은 여수시민과의 '약속'이고,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면서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에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및 검사인력 충원" …전남동부권 전체 검사기간 개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남 여수시에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가 도입되고 검사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수에서도 자체 분석이 가능해 방사능 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여수를 비롯해 목포, 제주 등 3곳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각 1대씩 도입하고, 현장 시료 채취를 위한 인력도 새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과 함께 검사인력도 보강된다.

여수는 전남의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방사능 검사장비가 없다 보니 그 동안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장비 도입으로 검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검사장비 도입으로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 · 고흥 · 화순 · 보성 등 전남동부권에서 채취하는 수산물 검사기간이 평균 1~2일 정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시스템 강화와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도 계속 힘써 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남 위원장 임명

주철현 의원 등 17개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전남 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을 통해 시도단위 광역위원장 17명이 인선됐고, 전남의 위원장으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선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 및 부위원장 인선을 완료하며 출범했고,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교통 등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임명 직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4가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전남지역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발굴 및 지방정부 조례 제정 추진, 기본사회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대책 차원에서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필요한 기본금융과 기본주거 등을 꼼꼼히 논의해 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사회에 부합하는 지역의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 지역 숙원 해결과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 · 댐 · 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마침 9월 14일이 작년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이하는'산업단지의 날'이다"라고 언급하며,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장

여수 을
김회재

- 1962년 여수
- 연세대학교 법학과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위원
- 前 국회 운영위·국토교통위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회재 의원

"국토부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환영"

익산~여수 일반철도 사타 조사 시작

(복선전철 고속화 89.2km, 사업비 3조 357억원)

"사전타당성 조사, 지금 당장의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로 평가해야"

김회재 의원은 2021년 1월 "국토부의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이다.

국토부의 사업타당성조사 추진사업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포함됐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라선이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낮은점을 개선하기 위해 3조 357억원을 투입해, 익산~여수 간 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회재 의원은 "호남민들의 염원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고,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여수를 찾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당락을 가르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웠고, 그 결과 서울·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면제도 촉구했다. 호남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전라선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여수발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운행 … 여수에서 강남까지 한번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9월 1일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열차가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SR과 여수엑스포역에서 환영 행사를 개최하며 "전남 동부권과 서울 강남을 잇는 또 하나의 고속철 운행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면서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하나 된 힘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노형욱 前 국토부 장관,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전라선 SRT 운행을 촉구해왔다.

이번 전라선 SRT 운행으로 여수에서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오고 갈 수 있게 된 만큼, 철도 이원화로 야기된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형열차 ITX-마음을 매일 4회 여수엑스포역에 투입하고, 향후 KTX도 1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면제 추진 등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지난 6월 2일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순천대에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남해안권의 효과적·실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실시설계 업체 최종 선정 환영…올해 12월 착공에 청신호"

김회재 의원은 지난 5월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실시설계 담당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시설계 담당 업체 최종 선정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해 12월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부는 지난 5월 4일 입찰 사업자들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가격평가를 거쳐 17일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일괄시공 적격자로 최종 선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즉시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8년간의 공사를 거쳐 2031년 해저터널이 완전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으로 여수와 남해 산업·관광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등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영호남 화합, 상생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여수와 남해를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해저터널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고,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을 위한 올해 국비 예산 48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 적극 지원 요청

김회재 의원(여수시 을)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남·여수 국토교통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SRT 전라선 조속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관광도로 제도 도입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조속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등 전남·여수 지역 주요 국토교통 현안 사업들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SRT 전라선 투입으로 수도권과 호남권역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남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며 "추후 교통편익을 위해 SRT 뿐 아니라 수서발 KTX를 추가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적정 사업비를 위한 예산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여수 백리섬섬길 제 1호 관광도로 지정,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조속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바로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개최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여수 시민회관에서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등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 동부권의 뜻을 모으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 동부권 화합·영호남 상생 의료인프라 구축, 여수 대학병원·순천의대 설립이 답입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12곳에서 의대 유치를 추진 중이다"면서 "씨를 뿌려야 곡식을 얻는데,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도 의대·대학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전남 동부권의 의료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선 일치된 여수시민의 하나 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

의정평가 3관왕 이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병철 의원이 지난 1월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에 참석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청년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의정활동과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의원이 수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 등 어려운 민생경제와 지역민을 대신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목을 이끌어 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질의 하나 하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엄정하게 평가해 선정해주신 만큼 수상의 영광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라면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국민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 정치인 소병철의 소명"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지역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철

- 1958년 순천
- 서울대학교 법학과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前 전라남도 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
- 前 농협대· 순천대 석좌교수
- 前 제38대 법무연수원 원장
- 前 대전 검사장 · 前 대구 고검장

법사위 간사 및 제1소위·예결소위원장 선임

소병철 국회의원이 6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7월 26일에는 예산 · 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소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되어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고 과거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후보로 오른바 있다.

2013년 검찰에서 퇴임한 후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소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가장 맹렬한 투사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년 국회 장벽에 갇혔던 여순사건특별법을 행안위 ·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전공대법 · 농촌사랑기부금법 · 아시아문화전당법 등 여 · 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간 21대 국회 법사위 간사들은 재선의원들이 맡아 왔는데 초선임에도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남다른 강단과 협상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로 소 의원의 강직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여 · 야간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앞으로 구원 투수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특히 모든 상임위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정 여부부터 통과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 간사로 소 의원이 선임된 것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입법 과제가 산적하다"면서, "간사로서의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통과되고 검찰 ·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시 · 견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호남 지역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순천 · 전남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동네 한바퀴" 순천 전역 민생소통 광폭 행보

소병철 국회의원은 도 · 시의원과 함께 "우리동네 한바퀴" 민생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동네 한바퀴"는 읍 · 면 · 동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을 만나며 소탈한 대화의 장을 열며 소통하는 행보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월 전진 대회를 시작으로 3월과 4월에는 6개 권역별 의정보고회를 7주간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에 역점을 두고 강행군을 펼쳐 순천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소 의원은 "주민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좀 더 가까이에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동네로 찾아간다"며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좀 더 가까이 시민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 격이 없는 소통과 대화의 장을 연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민생소통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시민들의 고견을 새겨 듣고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국회 의정활동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며, ▲게릴라 토크 ▲경로당 방문 ▲각계각층 의견 청취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을 위한 소통의 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향후 순천시가 발전해 나갈 방향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라며 "이번 민생소통은 여러 가지 민심을 경청하고 민생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후에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유지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 · 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도록 해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됐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 박수 쏟아진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소병철 국회의원의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 의정보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월부터 2개월간 7주에 걸쳐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 의정보고회에 누적 인원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만으로도 소 의원은 합격이다", "소 의원이 전남도 · 순천시와 협조해 순천시 역사상 가장 큰 예산을 확보했다", "소 의원의 진심을 느꼈고 정치인의 품격을 봤다"는 등 찬사가 쏟아졌다.

소병철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모든 내용은 국회의원 · 도의원 · 시의원 어느 한 사람이 개인기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원팀 민주당의 정당정치를 통해 호남 제1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 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며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순천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킨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토대로 세계적인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의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등 굵직한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남해안권발전법' 등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순천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순천 민주당 전진대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2월 11일(토) 〈순천 더불어민주당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 전진대회에서는 순천민주당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합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소병철 위원장은 "우리 순천민주당은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성취한 것은 하나 된 순천민주당원들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이므로 당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쉬운 것은 위원장인 저의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이므로 사과드린다"고 소신을 전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를 든든하게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강한 다짐으로 전진대회를 마무리 했다.

(가칭)순천정원초 신설 확정, 예산 약 561억 투입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 ·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신설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저를 비롯한 김진남 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은 "이번 학교 신설 결정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무게감 있는 소병철 의원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통한 것"이라며 "일 잘하는 황소일꾼 소병철 의원이 그동안 많은 것을 바꿨고, 앞으로도 바꿀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신설은 25개 학급, 병설유치원 2개 학급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지역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서동용

- 1964년 광양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現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 합격(44회)

서동용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소통 나서

주민들 마을 민원부터 정치적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
서 의원 “민원청취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 마련 노력”

서동용 국회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 을)이 지난 8월 1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구 주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서 의원은 광양시 광양읍 동외마을을 시작으로 혹서기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고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장소를 특정해 지역민을 초청하는 기존 보고회 방식과는 차별화했다.

이에 서 의원 측은 이번 보고회는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마을의 작은 민원부터 정치에 대한 생각까지 서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광양읍 인서마을 한 주민은 “가까이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우리 마을 현안을 직접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바쁜 국회 일정에도 이렇게 찾아 민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는데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서 의원도 “코로나 장기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구 때문에 주민들을 일일이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마련했다”며 “성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더 많은 할애해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건상 모든 마을을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계획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되도록 찾아가는 보고회를 추가로 진행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서 의원 측은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임시국회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써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함께 각종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광양 덕례초 등굣길 안전 확보 시급”

… 안전지킴이 활동

서동용 국회의원 등이 지난 3월 13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양 덕례초등학교를 찾아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서동용 의원이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뛴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동용 의원은 “여러 민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광양시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 매실수확 일손돕기 활동 펼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는 6월 5일 옥곡면 일원에서 찾아가는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뛴다, 지역농가 매실수확 일손돕기’활동을 펼쳤다.

이후 동부농협 옥곡지점에서 진행된 농가 간담회에서는 문정태 동부농협조합장, 김금자 농가지부 회장, 강복연 옥곡발전협의회 부회장, 정철기 옥곡새마을협의회 회장 등 여러 농가가 참여해 지역 농촌의고충과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매실 판로개척, 매실에 대한 연구 활성화, 고품질 매실 생산, 다양한 가공필요성, 여성농민 목지 혜택 증대에 대해 공감했으며, 서동용 국회의원은 전국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광양 매실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한의학연구원 매실연구소 광양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광양항 발전 토론회” 열려

해양수산부·전라남도·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총출동
“광양항 발전, 스마트항만 구축 성공” 한목소리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5월 4일, 광양시에 위치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광양항 발전과 향후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광양항의 스마트항만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기대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과 신정훈 국회의원(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웅 고려대 교수가 ‘스마트항만을 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편 지난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구축 계획이 수립된 이후, 21년도에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됐고 현재는 광양항의 현재 설비와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이 발주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자동화항만 사업을 테스트베드화 해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개발과 실증과정도 수행하는 동시에, 광양항을 향후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광양항을 지역구로 둔 서동용 의원의 노력도 있었다는 평가이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으로부터 광양항 항만자동화 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서의원은 향후 추가 예산 확보와 총사업비의 최종 협의,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의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항은 국내 물동량 2위의 항구이자 전남 동부권 경제의 핵심 전진기지”라며,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기술이 성공해서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국내 다른 항만들의 항만자동화를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면밀히 소통하고 직접 추진 현황도 챙기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열어

“광양만 이차전지 산업 육성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경제성장 동력 발판 마련” 한 목소리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의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는 “기회발전특구 소개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맡았으며,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책 설계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전문 기관의 유치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나섰다. 이차전지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만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원료가공 및 소재생산,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과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실증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연구시설, 그리고 대용량 이차전지의 다양한 전방 수요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 전문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 계신 만큼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현황을 면밀하게 논의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서동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구축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정훈 의원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

광주(상무) ~ 나주(남평~혁신도시~KTX나주역) 광역철도 국정과제 SOC사업, 총사업비 1조 5,192억원

호남권 최초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광역철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 · 화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나주 간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총길이 26.46km로, 동일 생활권인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두 도시 간 평균 이동 시간은 약 81분에서 33분으로 48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된 이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그동안 신정훈 의원과 나주시는 국토부, 기재부 등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해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지속 건의해왔다. 특히 신 의원은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과의 협의를 끈질기게 이어나가며 광역철도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광주 · 전남(나주) 광역철도는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를 잇는 최초 광역철도다. 그동안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2021년) 이후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궈낸 결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공동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사업 선정 과정에 최선을 다해준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감사하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위원장

나주화순
신정훈

- 1964년 나주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現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前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초대 농어업비서관
- 前 민선 3, 4기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대 수비’총력전 펼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면담 이어 의원단 단체행동 주도해 정치 감사에 따른 총장 해임 건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지난 5월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 · 화순)은 ‘한국에너지공대 수비’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신정훈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출연계획 축소’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12일 즉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광주시당 명의로 ‘윤석열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긴급회동을 갖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신 의원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도 개별면담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차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위기에 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빈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을 초청해 한국에너공대 설립의 의의와 향후 학교 지원을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의원 등은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전가하고자 ‘정치탄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 · 전남 정치권,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너지공대가 실제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711억으로, 동기간 한국전력 지출예산(영업비용)인 103조 8753억원 대비 0.07% 수준에 그쳤다.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에는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5명이 함께해 한국에너지공대 정치 감사에 따른 총장 해임 건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자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1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전격 방문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성과와 현안을 듣고 있다.

‘쌀값정상화법’ 재추진

신정훈 의원(나주 · 화순)이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작년 8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값 지지에 한계가 있다. 반복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 내려면 보다 근본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며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7건 40억 확보

신정훈 국회의원(나주 · 화순)은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나주 4건, 화순 3건 등 총 7건에 40억원의 국고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에서 진행될 사업으로는 ① 금천면 노후 도시계획도로 (4억원) ② 공산면 노후도로 정비 (3억원) ③ 나주시 시도 16호선(봉황송현~다도궁원) 확포장 (5억원) ④ 나주시청사 본관동에 대한 내진보강 (8억원)이다.

화순의 경우에는 ①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13억) ② 화순읍 복암선 도시경관 개선사업 (3억원) ③ 화순군 스마트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사업에 (4억원) 이다.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개선책 마련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보고회 통해 화순 비전 제시

화순읍 주민 등 300여명 참석, 성황리에 화순 첫 스타트

신정훈 의원(나주 · 화순)의 ‘2023년 의정보고회’가 연일 지역주민의 뜨거운 열기와 참여 속에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화순축협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화순읍 주민 및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군의회 의장, 임지락, 류기준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신정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폐광지원특별법 통과 과정을 회고하며, 폐광기금 20년 연장과 산정기준 변경이 화순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주민 앞에 보고하고,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화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폐광지원특별법 통과 과정을 회고하며, 폐광기금 20년 연장과 산정기준 변경이 화순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주민 앞에 보고하고,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화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바이오 · 메디컬 허브 화순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그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백신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면역치료 인프라 조성 및 천연물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중한 씨앗을 마련했다. 또 신정훈 의원은 면역 · 유전자 치료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화순 백신 산업특구를 ‘보스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시행, 이양 홍수조절지 수변공간 조성, 어린이 직업체험장 개장, 화순 문화예산 보존 전승 및 관광 자원화, 스포츠관광 마케팅 활성화 등 지난해 문화예술분야 주요 성과를 알리고 ‘남도관광 1번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위원장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 1959년 담양
- 전남대학교 경영학

- 現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남도당위원장
-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前 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TF 단장

이개호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헌정대상 수상은 지역민의 성원 덕분,
앞으로도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

이개호 의원(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이 지난 8월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3차 년도인 22년 5월30일부터 23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정활동을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해 관련 자료를 엄정히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는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성적 및 통과율 ▲공동발의 통과 성적, ▲국정감사 출석,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상임위 전체회의에 단 한번 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임위 전체회의 100% 출석 의원은 현 21대 국회의원 299인 가운데 단 12명에 불과하고 3선 이상 다선의원은 단 두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를 화두로 문화관광기반시설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 사각지대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올 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참사와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정부 국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선의원임에도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지역민께서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직인 만큼 항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면서"이번 헌정대상 수상이 항상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 덕분임을 잊지않고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초소형전기차 관련 규제완화 적극 나서야'

이개호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금지 등 초소형전기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영광군의 전기차산업과 관련해 시행 초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는 영광군 대마산단에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입주하고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초소형전기차산업의 수요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깊은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이개호 의원(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이 지난 1월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청년 및 대학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를 화두로 ▲심각한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편중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방지책 마련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촉구 ▲노후화율 높은 지방공공체육시설 지원확대 ▲전통사찰 개보수 자부담 비율 축소 ▲마한사 지원확대를 통한 우리 고대사 바로잡기 필요성 등 다방면에 걸쳐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 열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광굴비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빨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지역구 특별교부세 81억 확보

4개 군과의 공동노력으로
재난 및 현안 15개 사업 연내 추진

이개호 의원이 지역구 4개 군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15개 사업 총 81억원에 이르는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도로 등 주민 편의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및 교량 정비를 비롯해 문화시설 설치 등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아우르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시급히 필요했던 각 군의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담양군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수북 나산지구 교차로 개선 8억원 ▲어르신 보행 취약지 안전사고 예방사업 2억 원 ▲월산면 도동소하천 정비 3억 원 ▲창평 신기마을 진입 교량재가설 8억 원 등 4개 사업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학교면 금송리(군도 10호선) 도선 선형 개선사업 2억 원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억 원 ▲군도 12호선(해보 밀재) 위험도로 정비사업 3억 원 ▲함평읍 농협~국토정보공사 도로확포장 10억 원 ▲구국도 23호선 위험도로 침하 정비 1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영광군은 ▲장애인 취 · 창업 전문 교육지원센터 설치 7억 원 ▲홍농 수항교 보수보강공사 2억 원과 함께 영광군이 발 벗고 나선 ▲봉전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 등 3개 사업 총 20억 원이 반영됐다.

장성군의 경우 ▲장성읍 노후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8억 원 ▲장성 황룡면 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7억 원을 배정받았고 이와 함께 장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된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5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구 국립기관 유치 및 신성장 동력 마련 잇따라 결실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유치 확정 등

이개호 의원의 지역구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립기관 및 신사업 유치 노력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001억 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28년까지 장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이 의원과 장성군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건립'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또한, 국비 100억 원 규모의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되었고총사업비 196억원에 이르는 담양군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은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7,619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군 이전 사업은 올해 9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약속드린 공약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지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지와 지지 덕분"이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

‘전남 국립호국원’ 장흥군 유치 최종 확정

전남 최초 국립호국원, 국비 497억 원 투자해
봉안시설 2만기, 공원 등 조성
연 40만 명 방문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예상

김승남 의원이 “전남 장흥군이 국가보훈부가 시행하는 「전남 국립호국원」 사업 유치에 최종 성공하면서 국비 497억 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호국원 사업은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을 안장할 전남 지역 최초의 호국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기존 전북 임실호국원이 오는 2024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 · 전남의 국가유공자들은 ‘전남에 새로운 국립묘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번 「전남 국립호국원」의 장흥 건립 최종 확정으로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공원 등이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46만 7,730㎡)에 조성되면, 광주는 물론, 전남의 모든 시군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 특성상 연 40만 명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장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 의원은 “전남 국립호국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호국원 방문객들을 수용할 관련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어 우리 장흥의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과 민간 사업 유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쾌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선정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 조성 본격화
2031년까지 발사체 특화지구 조성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5일“전라남도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말하며 “우주항공 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173만㎡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는 2031년까지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와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 혁신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가 문을 연 이후 나로우주센터 주변을 미국의 휴스턴 NASA 우주센터와 같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김승남 의원은 “2012년부터 전남 고흥군을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온 저의 노력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우주발사체 민간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고, 2031년까지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말했다.

“보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선정…국비 50억 확보”

김승남 국회의원은 “보성군이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 복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갯벌은 소중한 탄소흡수원이자 어촌마을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며 “보성군이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해양관광의 거점이자, 기후 위기를 막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대표발의하고 65명의 여야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순신 특별법'과 관련해 김승남 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이 지난 6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진군수협, 수산물 위생안전 저온위판장 사업지로 최종 선정…총사업비 30억원 투입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3 유통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사업’ 공모에서 강진군수협이 저온위판장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저온위판장 시설 설치를 위해 2024년까지 국비 15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3억 등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김승남 의원은 “강진군수협 저온위판장 시설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강진 마량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고흥군,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선정

국비 192.3억 원 확보…고령자복지주택 150호 건립 확정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7월 30일 “전남 고흥군이 ‘2023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19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주거와 의료, 돌봄, 여기 등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특화 주거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72개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2019년 영암군, 2021년 완도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전체 인구 6만 1,542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3.6%(2만 6,845명)로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 고흥군도 고령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고흥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2만 6,845명 가운데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 3,198명, 국가유공자가 450명, 차상위계층이 1,687명, 노인주거급여 대상자 중 무주택자가 828명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계층이 6,163명에 달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흥남계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수가 30명에 달하는 등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고흥군 공영민 군수 등과 협의해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에 물리치료실과 공동식당, 이 · 미용실, 카페, 옥상정원 등 연면적 1,8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 150호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고흥군에 고령자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강진 서중마을, 고흥 연홍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 사업’ 대상지 선정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3월 6일 강진군 서중마을과 고흥군 연홍마을이 해수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승남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가운데 이 사업에 응모한 강진군과 고흥군(보성군, 장흥군 미신청) 2곳 모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10곳의 어촌마을이 이 사업에 응모했으며,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순천시가 사업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강진, 고흥을 비롯해 경기 화성, 전북 고창 4곳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당 총 4억원(국비 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강진군 마량면 서중마을은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마을식당과 특산물 판매장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서중마을 인근에 까막섬, 마량항 등 유명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서중마을이 지역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금산면 연홍도에 위치한 연홍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둘레길을 재정비해 ‘걷기 좋은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마을 관광시설에 태양광시설도 설치해 ‘탄소중립 섬’으로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승남 의원은 “이 사업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기반시설이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 1965년 고흥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前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前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前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행안부 특별교부세 86억 원 확보

보성 22억 원, 장흥 22억 원
강진 22억 원, 고흥 20억 원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8일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 총 8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고흥군(20억)과 보성군(22억), 장흥군(22억), 강진군(22억) 등 총 4개 지역에서 16개 사업의 예산 총 86억 원을 확보했다.

고흥군은 ▲장수제 별빛 그늘길 조성사업(5억), ▲남양 선정 급경사지 위험사면 정비사업(8억), ▲포두 세동제 그라우팅 정비사업(7억)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보성 호국전시관 건립사업(8억), ▲경백 수남군도 10호선 및 지선도로 확 · 포장사업(6억), ▲보성 원붓소하천 제방보수사업(8억) 등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

장흥군은 ▲탐진강 습지공원 데크 시설 정비사업(4억),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보수사업(4억), ▲청소년 수련원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사업(2억), ▲장공 게제1교 위험교량 정비사업(5억), ▲관산읍 동두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억), ▲지방도 843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3억), 관산 사금항 방파제 연장사업(2억) 등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은 ▲강진만 해안도로 개설공사(7억),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10억 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5억) 등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86억 원은 보성, 장흥, 강진, 고흥의 발전을 위해 값지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 장흥, 강진, 고흥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장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 1955년 해남
- 목포해양대학교 명예 행정학 박사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
- 現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8일간 단식투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윤 의원“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만이 유일한 해법”

윤재갑 국회의원(해남 · 완도 · 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해 강한 규탄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6월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던 시점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단식에 돌입했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일본의 해양방류에 명분만 주었고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고 4월에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 · 완도 · 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 지구(총 사업비 173억) ▲완도 세동지구(44억) ▲진도 고야지구(95억) 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18억) ▲해남 황산지구(40억) ▲해남 오호지구(6억) ▲완도 충도지구(10억) ▲완도 삼산지구(6억) ▲진도 의신지구(25억) ▲진도 고군지구(34억) ▲진도 군내지구(10억)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 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완도군 생일면 ‘봉선권역’ 39억 규모 …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5일, 2024년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완도군 생일면 봉선권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에 생활편의시설 증진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봉선권역에는 총 사업비 39억이 투입되어 ’28년까지 ▲문화복지센터(6억) ▲공동어구보관소(5억) ▲홍수대비 배수로 정비(4억) ▲굴전리 복지회관 리모델링(3억) 등이 조성된다.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 개최

해남 · 완도 · 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는 지난 5월 31일, 해남군 명량 대첩지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 · 광역의원과 해남 · 완도 · 진도 군민과 당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지역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핵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덩달아 우리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궤멸을 초래하고,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의 지역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 중 73%는 방사능 허용기준을 넘었고 그 중, 6%는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토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는 윤재갑 위원장(해남 · 완도 · 진도 국회의원) 이외에도 해남 · 완도 · 진도 수협 조합장의 성명서 발표와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이뤄졌다.

윤재갑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일본의 핵 테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대한민국 김산업 메카로 선정

해수부 김산업 진흥구역에 선정돼 50억 지원 예정

윤재갑 의원은 지난 3월 9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공모한 김산업 진흥구역에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김 산업 성장 여건 조성이 필요한 곳을 지정해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남군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해남 김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른김 가공공장도 100개소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로 김 산업이 어민소득 향상과 수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 황산면 일원은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을 생산하는 해역으로 지난해 75어가, 966ha에서 2,708톤의 유기인증 김을 생산해 3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김 산업 진흥구역 선정은 해남 김 산업 경쟁력강화와 수출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2억 확보

[해남] 황산면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조성 **8억**
북평면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 **12억**

[완도] 전지역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6억**
금일읍 읍청사 신축 **10억**
소안면 군도 11호선(가학) 위험도로 정비 **2억**
소안면 군도 11호선(맹선) 위험도로 정비 **2억**

[진도] 진도읍 진도 볼링장 건립 **5억**
전지역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억**
전지역 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 설치 **3억**
임회면 팽목마을 침수피해 예방사업 **4억**
지산면 상봉암 붕괴위험 사면 정비 **5억**

서삼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 할 것”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지난 6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이날 오후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장에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예산)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춘 것이 서 의원의 최대 장점이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헌법 제54조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 임무와 국가재정법 제61조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위원장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 1958년 무안
- 전남대 대학원 NGO학 박사

- 現 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現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前 민선 3·4·5기 무안군수
- 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불요불급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경제위기 극복”
(不要不急) (必要必急)

여·야·비교섭단체 의원 50인으로 특위 구성, 활동 시작

2022년 결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가 지난 7월 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예결위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헌법 제54조에 따라 12월 2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의 의원(민주당 28, 국민의 힘 19, 비교섭단체 3)으로, 이날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며, 강력한 신보호주의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저출생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구소멸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의 긴장 고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치고 힘든 삶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법이 정한 기일과 원칙을 준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있었다”라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에 대해“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로 인한 벼 피해 지원법 발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4,033ha 중 벼 3,093ha(77%) 차지… 전남·전북이 98% 차지

가뭄 및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4천33.6ha의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다. 이 중 3천93ha(77.0%)가 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이 각각 1천882ha(60.8%), 1천154ha(37.3%)로 호남에 피해가 98% 이상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미비하다”며, “올해 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며 모내기조차 어려웠었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해당 농가가 통상적으로 얻을 예상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가뭄 · 홍수 ·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며 실제로 재배했을 때 수준처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협 · 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올해 수입 양파 양보다 4배 이상 많아 정부 수급조절 실패, 농가 희생 강요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만 톤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즉각 철회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7월 18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대 9만톤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2만톤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 · 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만원에 달한다. 양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농업경영비’는 2022년 기준, 2,511만 9천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며,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2024 총선승리 전진대회 성대하게 개최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 1,000여명 모여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지난 2월 25일 화순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2024 총선승리 전진대회를 가졌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화신) 행사에는 신정훈 도당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임선숙 최고위원, 서삼석 · 김승남 · 소병철 · 김회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복규 화순군수와 당 소속 광역 · 기초의원 및 전남지역 여성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도당 여성위원회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 '정치를 바꾸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해 부드럽지만 강력한 여성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 중 피켓 퍼포먼스와 결의문 낭독에서는 2024 총선승리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함을 규탄했으며, 전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인 여성당원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정치의 리더로서 주체가 되는 여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한민국을 움직여 주시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함께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화신 도당여성위원장은 "여성당원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지속적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면서 "전남에서 여성의 강한 힘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 2024 총선승리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면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여성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달라진 민주당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3월 10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남도활력소득' 도입요구
전남의 급박한 현실을 반영한 특화형 기본소득 필요 주장
인구감소 면지역 3~4개 시범, 1년 약 120억 예산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전남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3월 10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신정훈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광역 · 기초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삼호 민선7기 광주 광산구청장의 사회로 진행 된 이 날 토론회는 이규현 전남도당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전남도의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김병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 박철환 기본소득 전남추진본부 사무처장 ·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규현 특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인구 · 복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특화정책으로서 실시 타당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위기 정도가 심한 인구 3천명 이하 면지역 3~4곳을 우선 선정해 개인당 년120만원(월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약 240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본소득 대상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해당 면지역에서 사용토록 해 쇠락해 가는 면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철환 사무처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고 최소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특위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등을 활용하면 전남도 및 시 ·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오직 민생을 살피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전남형기본소득 특위가 그 중 하나다. 앞으로 전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주도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와 지역사회와의 신속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논평

윤석열 정부 1년은 불통과 독선, 굴욕외교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민의 자존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우려만 넘치는 아찔했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2022년 3월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인 0.73%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제거를 위한 짜맞추기 검찰수사로 오직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정치 인식의 부족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전무한 불통의 대명사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사출신 인사들의 정부요직 등용과 무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검찰독재공화화 ▶무책임한 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부재로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굴종적인 대일외교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 ▶법과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묵인하는 이중성 ▶적대적 노동관으로 노조탄압과 과로사회를 조장하는 주69시간제 ▶야당과의 협치가 전혀 없는 불통과 독선정치 등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절망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전후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민생과 경제에 온통 비상등이 들어오는 위기상황에도 여전히 일방적 통치와 지배를 위해 갈라치기와 내편정치에만 골몰하는 무능함 그리고 퍼주기 굴욕외교에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과의 회담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직 정적 제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에 비해 8단계나 떨어졌다. 이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소통과 협치의 정치로서 '불통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각종 지표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덮치고 있음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구조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설립을 염원하는 지역 민심에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지난 정부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어 설립 됐음에도 호남을 차별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다분히 정치적 표적감사로 비춰진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역행한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민심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3. 5. 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 나주에서 열려

이재명 대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무책임하다 비판

전남도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하는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 를 4월 7일 나주시 노안농협 벼 육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온갖 거짓주장과 왜곡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어려운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벼 육묘현장을 둘러본 후 힘든 농촌현실을 보듬고 벼랑 끝 농민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로 공식화 했으며, 위기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쌀은 생명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양곡관리법을 재표결 할 것이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 쌀은 사양산업이 아닌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기에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쌀값정상화 TF팀장)은 입법과정에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은 여당의 자세를 문제 삼으며 "절박한 농심을 외면하고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정부여당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이라고 왜곡 하는데 이번 법안은 농민을 지키는 '남는 쌀 방지법'이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민대표는 "대 다수의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성토하면서 "법안이 꼭 재추진되어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4월 4일~6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국민여론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총출동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월 30일 전남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되는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오전 10시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최고위에는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박찬대 · 서영교 · 장경태 · 송갑석 · 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및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지역에서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김승남 · 김원이 · 윤재갑 · 주철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전국 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천명할 것과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방조하는 정부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면서 "피해대책 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수산업계의 위기와 국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겠으며 앞으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수산물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싸워야 할 대상인 일본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윤석열 정부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수산업은 지역경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말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와 민주당의 단결된 힘으로 험난한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문을 열고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국민의 인내는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폭거에 국민이 행동할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오염수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어민, 수산인 대표 및 소상공인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부는 이후 목포역 광장으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집회'에 참석해,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장을 가득 메운 1,000여명의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 등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어민과 수산업계, 전통시장 상인대표, 외식업계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투기로 인해 관련업계 가족과 종사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원과 함께 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전남서 개최

전남도당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에서 주최하는 "이기는 민주당, Again"을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에서 개최했다.

3월 24일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전국을 순회하는 민주아카데미로 현장에서 당원들과 함께 당의 정책공유 및 내년 총선 전망과 승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고민정 최고위원,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정봉주 교육연수원장과 당 소속 광역 · 기초의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 생중계로 진행됐다.

행사는 1부 명사특강과 2부 집단토크, 질의응답 및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이뤄졌다.

1부 명사특강에서는 정세현 전 장관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향후 국제 정세분석과 남북문제 관계개선을 위한 대책과 방향, 현 정부 대북기조의 문제점과 남북경색국면에 따른 민주당이 가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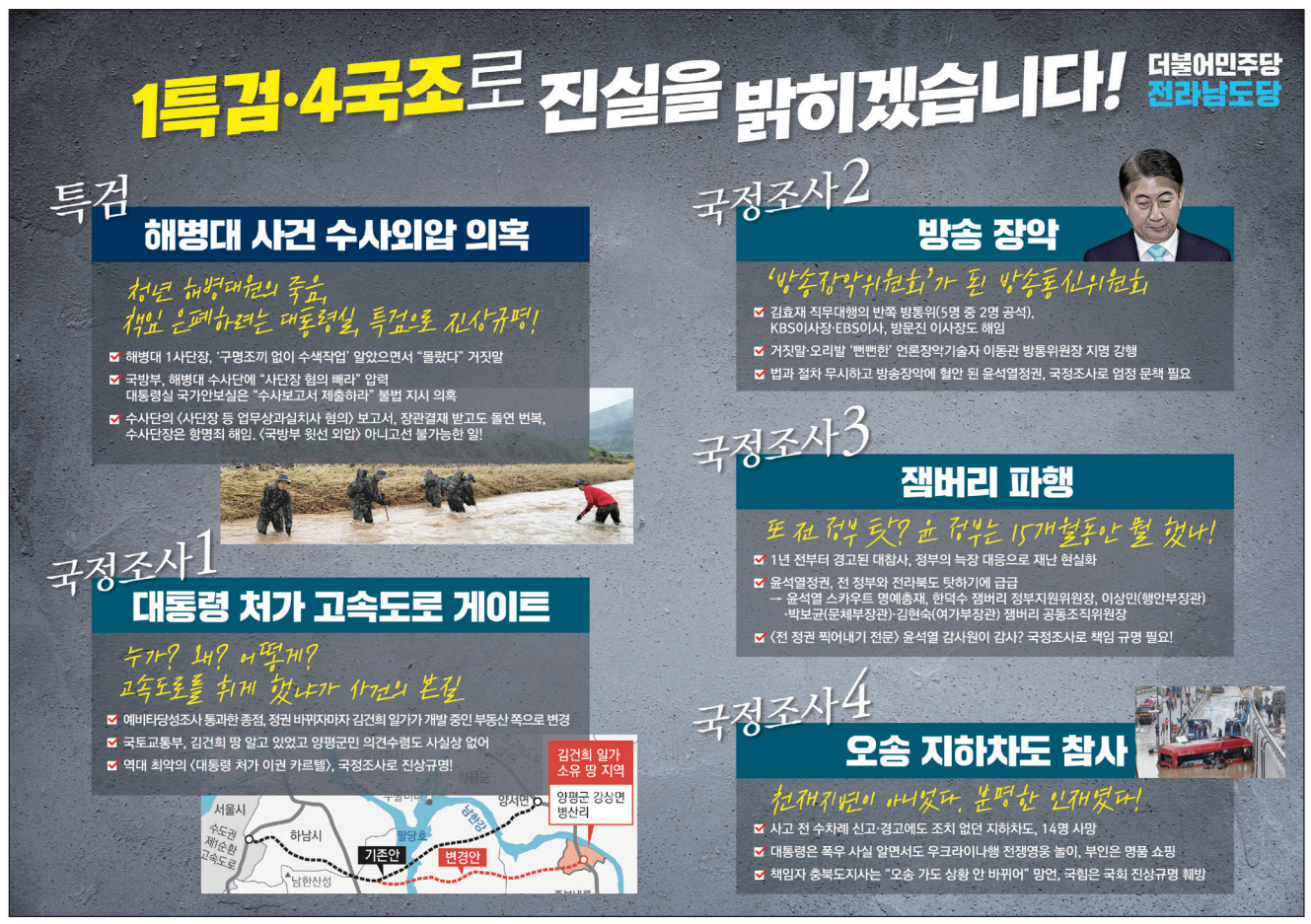
2부 집단토크에서는 정봉주 원장의 사회로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남영희 민주당 소통관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검찰독재의 문제'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외교 문제' '총선전망 및 승리방안' 등을 주제로 민주당과 당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피켓 퍼포먼스에서는 민주주의 탄압과 검찰독재, 대일 굴종외교 등 현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봉주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당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당의 정책과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당의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당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내년 총선승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는 민주당, Again은 총선대비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당원과 함께 2024 총선승리와 수권정당으로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 교육연수원에서 17개 시 · 도당 순회 현장교육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저지를 위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6일차였던 지난 9월 5일. 이날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대표의 결연한 의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국민들의 사연을 함께 들었다.



대한민국
바다
우리 바다 지키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7문 7답
1 일본은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하나?
육상보관 가능(약 3천억~2조원)하나,
가장 값싼 해양투기(340억원) 선택
2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나?
세슘, 탄소-14 등 64개 이상 방사성 핵종 포함,
인체 유해질병 유발 위험
3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믿을 수 있나?
처리 과정과 표본의 신뢰성 부족,
여과 불가능한 삼중수소 위험성 상존
4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신뢰할 수 있나?
IAEA는 검증이 아니라 원전 진흥이 목적,
오염수 투기에 적극적 입장
5 주변 국가의 대응은?
중국·러시아·태평양도서국, 강경한 반대.
후쿠시마현 주민 70%가 반대
6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도 영향이 있나?
후쿠시마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 검출,
오염수 수년 내 한국 도달로 피해 우려
7 오염수 해양투기 막을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국제사회 연대로 저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